이명박 당선자의 과학 행보를 주시하라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에 이은 과기부의 개편과 과학비지니스벨트가 그 핵심이다.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제시가 필요하다.

글 | 이은정 _ KBS 과학전문기자 ejlee@kbs.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과학 정책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됐다. 현재 이명박 당선자가 내놓은 정국 구상을 보면 과학 분야는 2개의 큰 틀이 움직이고 있다. 먼저 교육부와 과기부의 통합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과기부가 또다시 통합 논쟁에 휘말렸다. 그러나 이번 통합은 '과기부 폐지'가 아니라 '교육부 해체→과기부와 통합'이라는 점에서 과거보다는 희망적으로 보인다.

인수위에서는 교육부의 학교 규제기능은 각 시·도교육청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고 교육지원 기능은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정책기능과 노동부의 직업훈련 기능을 합해 과기교육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과기부 입장에서는 교육부와 통합돼 과학교육부가 되면 대학의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각 부처별로 따로 떨어져있던 국가 연구개발도 일원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사회의 인적 구성에서 기존 교육부 공무원과 과기부 공무원이 합쳐졌을 때 과학을 담당하던 과기부의 전문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TF팀 본격 가동

두 번째는 과학비즈니스벨트다. 이명박 당선자는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사공일 전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엘슨 두바이 국제금융센터감독원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특위 산하의 6개 TF팀 가운데 하나로 과학비즈니스벨트TF팀을 만들고 민동필 서울대 교수를 팀장으로 임명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온 과학도시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는 셈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원래 가속기를 중심으로 과학도시를 구성하자는 은하도시 구상에서 시작됐다. 이것이 국제과학도시에서 국제과학기업도시로 바뀌더니 이제는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변화했다. 민동필 교수가 구상하는 국제과학기업도시는 세계적인 석학이 연구하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 인력이 모인 과학지식의 중심을 말한다. 대덕연구단지와 다른 점은 연구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공간, 예술공간이 함께 건설되는 것이다. 민 교수가 내놓은 청사진을 보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지역과 아파트 등이 건설되는 주거지역, 그리고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같은 문화지역이 한 도시 안에 어우러진다. 과학과 예술, 과학과 대

과학비즈니스벨트

중, 전통과 미래가 융합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 2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1단계에서는 5년 동안 기초과학연구기반시설과 연구소를 건설하고, 2단계에서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다시 5년을 투여하며, 3단계로 첨단예술 산업도시로의 도시공간을 건설하는데 10년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려야 완성되는 것이다.

행복도시가 국제과학기업도시로 바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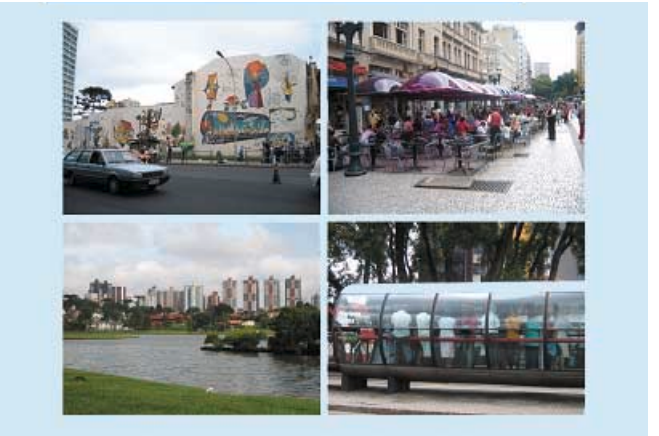
새롭게 건설되는 국제과학기업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의 대덕 연구 단지, 오송 바이오단지를 연결하자는 것이 과학비즈니스벨트다. 국제과학기업도시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교통(항공)이 좋아야 한다. 국제화가 가능하려면 여러 나라의 과학자, 기업가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영어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가 함께 통용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문화 시설이 뒤따라야 한다. 과학자를 감옥에 모아두고 연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활 환경을 즐기고 높은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페라하우스같은 고급 예술관, 박물관이 도시에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게 국제과학기업도시의 청사진이다. 그러면서도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가능하려면 대전, 오송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적당한 크기의 땅이 있는 곳은 인천 송도 신도시와 행복도시가 손꼽힌다. 교통면에서는 인천이 한수 위지만 대전, 오송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행복도시가 훨씬 가깝다. 또 청주공항이 인근에 있어 (규모는 아직 작지만) 국제공항으로 만들면 교통에 대한 고민도 해결된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한 행복도시를 '재활용' 하는 방법으로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행복도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결정이 끝났고 부지 정비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다. 수도를 옮기는 정책은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 당선자가 반대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청와대를 옮기지 않고 기존의 행복도시를 과학도시로 탈바꿈시킨다면 충청권의 민심도 거스르지 않으면서 서울도 지키는 최상의 방안이 된다.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하지 않고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있는 몇몇 행정부서를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과학계는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과학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데 굳이 반대할



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 성공사례 – 브라질의 쿠리치바

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 성공사례 – 텍사스의 오스틴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찬성하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과학계에서 나름대로 저명한 몇몇 인사들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검토하고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업에 참여하는 한 과학자는 "이명박 당선자의 특성상 어차피 대규모 사업을 하나 벌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아이템보다는 과학도시가 낫지 않겠느냐"며 "이 기회를 과학계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하튼 과학 분야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도덕성 시비와는 관계없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져다줄 변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앞으로 두 달, 인수위가 작업을 끝내고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가에 따라 과학도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T

글쓴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학위(생명윤리)를 받았다. 1995년 언론계에 입문 후 경향신문에서 10여 년간 과학분야를 담당했다.